

취약계층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필요성과 도입 방안

김상호·이계임·임소영·허성윤

요약

취약계층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은 2017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포용국가에서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

-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과 '품질 좋은 먹거리 공급'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농식품바우처 지원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됨.

기존 식품 지원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취약계층의 먹거리 확대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의 지원 정책 필요

- 현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식품 지원은 대부분 현금 형태(생계급여)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식품비가 아닌 타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적절한 수준의 식품 섭취를 보장할 수 없음.
- 현물 지원 중에서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할 경우 수혜자에게는 최소한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으며, 동시에 농식품 소비 및 섭취를 장려하여 영양·건강의 개선과 국내 농업의 수요기반 확대 또한 가능함.
- 미국, 유럽 등 외국에서도 현물 지원과 현금 지원을 병행하고 있으며 현물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함.

농식품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식품안정성(food security) 확대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긍정적 파급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

-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의 식품소비 지출 증대와 그에 따른 농축산물 수요 확대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의료비 절감 효과, 생산유발 효과나 취업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최근 개도국 지위 전환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적절한 대안이며 누구나 안전·신선한 먹거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푸드플랜의 '먹거리 정의 실현'에 부합함.

효과적인 농식품 지원을 위해 농식품 정책 담당 부처를 중심으로 대상자 발굴 및 관리, 사후조치 등을 추진

- 소득, 재산, 연령, 가구특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되 기존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거나 노인, 아동, 장애인 등 특정 집단을 우선 지원하며 적정 식품비와 실제 식품비 간의 간극을 메우는 수준에서 지원금액을 결정함.
- 원활한 운영과 사업 효과 제고, 운영방식 개선을 위해 농식품바우처 운영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실무를 담당할 전담기관을 설치함.
- 매년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환류체계를 구축함.

01

농식품바우처 지원제도 도입 과정과 기대 효과

문재인 정부는 농식품바우처 지원제도 도입을 국정과제로 설정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과 ‘품질 좋은 먹거리 공급’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농식품바우처 지원에 대한 논의 본격화

- 대통령 공약과제 중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바우처 지원’ 포함
- 취약계층의 식생활 및 먹거리 보장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는 인식하에 농식품바우처 지원제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음.
-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1인 고령 가구가 증가하면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섭취 및 식생활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건강 및 건강불평등(health disparities)에 대한 심각한 위협요소임.

농식품바우처 지원 시범사업 사회보장제도 신규도입 심의 통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주하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수행한 2017~18년 『농식품바우처 지원제도 도입방안 연구』와 2018~19년 『농식품바우처 지원 실증연구』, 2019년 『농식품바우처 추진체계 구축 연구』를 통해 지원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진단하고, 사업의 설계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함.

- 농식품바우처 지원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식품, 지원 방식, 구입 장소 등 지원제도 세부사항들을 도출함.
- 도시지역 1개 지역(춘천시)과 농촌지역 1개 지역(완주군), 1,600여 가구, 2,800여 명을 대상으로 쌀·과일·채소·우유를 지원하고 수혜가구의 식품비 지출 및 소비행태 변화를 관찰하고 분석함.
- 사업계획 및 시행지침 수립 및 시달, 지원 대상자 신청접수와 선정 절차 및 기준, 바우처카드 지급 및 농식품 구입 단계, 대금 정산 및 결과 보고,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순으로 추진체계를 구체화함.

농식품바우처 지원 시범사업이 사회보장제도 신규도입 심의 통과(2018년 11월)

- 사회보장제도 신설 및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심의가 의무화되어 있는데 농식품바우처 지원 시범사업도 2018년 11월 보건복지부가 사업의 타당성, 중복성, 전달체계 등을 검토하여 심의가 통과됨.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은 의료비용 절감, 산업 파급 효과 등 경제적·비경제적 기대 효과가 높은 사업

소비의 불평등도 개선

- 식품소비 지출액 기준 지니계수 0.293 → 0.287로 개선(6만 원 지원 시)
- 식품소비 지출액 상위 10~50%에 해당하는 집단이 전체 소비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1.9%에서 51.5%로 0.4%p 감소하는 반면, 하위 50% 집단이 전체 소비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3%에서 29.9%로 0.6%p 상승

의료비용 절감

- 연간 총 1,052억~2,045억 원의 의료비 절감으로 사회적 후생 증대

<표 1> 농식품바우처 지원제도 도입으로 인한 연간 의료비 절감액 추산 결과

단위: 백만 원

월평균 지원 금액 (원)	연간 가구 의료비 절감액 (A)		연간 사회적 의료비 절감액 (B)		총 의료비 절감액 (C) = (A)+(B)	
	MPS=0	MPS=1	MPS=0	MPS=1	MPS=0	MPS=1
60,000	38,497	74,857	66,686	129,670	105,183	204,527

주 1) 가구 의료비 절감액은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계산
 2) 구축 효과(식품비 지원으로 인한 기존 지출액 감소분) 0.2 가정
 자료: 이계임·김상호·김부영·김다혜(2018).

산업 파급 효과 : 생산유발 효과와 취업유발 효과

- 소비 순증가 462억 원, 1,164억~1,181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 1,872~2,892명의 취업유발 효과 기대
- 연간 순수 식품비 2,200억 원 규모로 시행, 소득분위 1/10분위에 지원 가정 시

<표 2> 농식품바우처 지원제도의 전 산업 취업유발 효과

단위: 명

구분		농식품 소비 증가 대비 다른 재화/서비스 증가 비율		
		(10, 0)	(8, 2)	(5, 5)
정책 대상 신선식품 대비 가공식품 비율	(10, 0)	2,892	2,484	1,872
	(7, 3)	2,158	1,897	1,505
	(5, 5)	1,668	1,505	1,260

자료: 이계임·김상호·김부영·김다혜(2018).

취약계층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필요성과 도입 방안

식품소비 지출액 증대

- 농식품바우처 지원 전과 후 비교 시 지원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약 33,841원의 식품 소비지출 증가 (전자바우처의 경우)

〈표 3〉 식품류별 지출액 증감 분석

구분	식품비 전체	과일	채소	곡물	우유	육류	기타
전자바우처	33,841**	9,798***	11,178**	17,853***	3,510***	-4,198	-4,299
종이바우처	22,644	8,343***	8,905*	11,936***	3,092***	-816	-8,817

주 1) * p<0.10, ** p<0.05, *** p<0.01.

2) 통제집단과 비교한 결과임.

자료: 이계임·김상효·임소영·허성윤·한정훈(2019).

식품 소비지출 증가로 농축산물 수요 확대 효과

-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생계급여 수급가구를 제외하고 5만 원을 지급할 경우 1,950억 원 수요 증대 효과

국내산 농산물 관심 증대

- 최근 개도국 지위 전환에 대한 효과적 보완대책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농식품바우처는 적절한 대안으로 부상
- 바우처 지원 전과 후 관심도 3.31점 → 3.64점으로 증가

식생활 및 식생활 인식 개선 효과

- 식사횟수, 식사 규칙성, 가족과 식사, 균형 잡힌 식단 확대 등으로 영양·건강 증진
- 2018년 실증분석 결과, 바우처 수혜자의 식생활 행태에 대한 평가 점수가 상승하였으며 건강한 식생활의 중요성과 유익성에 대한 인지도도 상승하였음.

02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지원 방식의 변화 필요

현금 지원은 타 용도 전용 가능성이 높으므로 영양·건강 개선을 위해서는 현물 지원이 적합

2016년 기준 약 1조 9천억 원의 중앙정부 및 지자체 예산이 식품지원제도에 투입되고 있으며, 이 중 80.5%가 현금 형태인 생계급여로 지원

- 전체 식품지원제도 예산의 78.6%인 1조 5,284억 원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비 형태로 취약계층에 현금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9.7%), 노인급식(4.7%), 정부양곡할인 지원(3.7%) 순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현금 형태로 지급되는 생계급여의 30% 이상은 식품비로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제시된 비중만큼 식품비로 사용하지 않고 타 용도로 전용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집단과 비교집단의 가계비 지출액을 비교 분석한 결과, 수급집단의 식품지출액¹⁾은 비교집단보다 8,442원만큼 낮음. 반면 교육비 지출액, 피복·신발·가구·가사 지출액, 수도·광열·주거 지출액은 수급집단이 비수급집단에 비해 높음(이계임 외 2017).
- 현금 지원 형태의 생계급여 지원이 정책설계 의도와는 다르게 식품비로 지출되지 않아 영양·건강 개선 효과가 낮아진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

〈표 4〉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여부가 6개 소비 부문별 지출액에 미치는 효과, 성향점수매칭 분석 결과

	식품	주거/광열/수도	가구/가사/피복/신발	보건의료	교육	교통/통신/교양/오락
성향점수매칭(PSM) 추정결과	-0.8442*	+2.5931***	+1.8568***	-4.1339***	+2.0767***	1.6746

주: *** p < .01, ** p < .05, * p < .1.

자료: 이계임·김상호·김부영(2017: 79). 한국복지패널 원시자료(2011-15) 분석. 이계임 외(2018)에서 재인용.

1) 식품지출액은 가정식 지출액과 외식 지출액의 합으로 정의되는데, 외식 지출액은 복지관에서의 무료식사 등을 포함하므로 가구가 섭취하는 모든 식품/식사의 현금 가치로 간주할 수 있음.

외국에서도 취약계층의 식생활 보장을 위해 현금 지원뿐만 아니라 현물 지원 병행

EU와 회원국은 Fund for European Aid to the most Deprived (FEAD)을 공동으로 조성하고 이를 이용해 구호단체에 현물 또는 현금을 지원

-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식재료 패키지, 식사, 기부식품을 수집 및 배분하며 곡물, 쌀, 유제품, 분유, 설탕, 육류, 채소, 이유식, 식용유 등을 지원함.

미국은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SNAP) Women, Infants and Children(WIC) 등 현물 지원 프로그램으로 취약계층의 농식품 소비를 지원

SNAP은 미국의 식품지원제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저소득 가구가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매달 일정 금액의 바우처를 지급

- 총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 이전소득의 합계액)이 빈곤선의 130% 미만, 순소득(총소득서 공제 적용 후 소득)이 빈곤선의 100%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매달 1인당 126.96달러를 지원(2018년 기준)²⁾

수혜가구는 편의점(Convenience Store), 중소형 마트, 대형마트, 베이커리, 채소 및 과일 판매점, 파머스 마켓 등 다양한 판매점에서 바우처를 이용하여 농식품 구매 가능

- 2018년 기준 SNAP 가맹 점포는 총 25만 6,516개이며 사용된 바우처 금액은 611억 1,635만 달러에 이룸.
- 미국 정부는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식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파머스마켓이나 직거래 농업인에게는 수수료가 없는 EBT 단말기를 지원하여 파머스마켓이나 농산물 직거래 시장에서 SNAP의 사용실적은 꾸준히 증가

WIC의 수혜 대상은 가구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85%보다 낮은 임신·수유부, 수유하고 있지 않은 출산부, 5세 이하 영·유아로서 보충적 영양 식품과 함께 WIC 클리닉에서의 영양교육과 상담, 모유 수유와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지원받음.

2) USDA FNS. <<https://www.fns.usda.gov/pd/supplemental-nutrition-assistance-program-snap>>. 검색일: 2019. 8. 2.

취약계층 대상 식품 지원 프로그램은 수혜 대상의 식품 소비 패턴과 생활방식의 개선뿐만 아니라 농산물 공급자와 나아가서는 국민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

건강한 식품을 지원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은 수혜자들의 식생활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Levedahl and Oliveira 1999; Jensen and Wilde 2010).

Canning and Stacy(2019)는 SNAP의 GDP 승수를 1.5로 추정하는데 이는 SNAP 지출 10억 달러가 GDP 15억 4,000만 달러 증가, 13,560개의 일자리 창출, 3,200만 달러의 농업소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

최소한의 선택권은 보장하면서도 정책 효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바우처 지원방식이 효과적

현물 지원의 일종인 바우처 형태로 지원할 경우 수혜자에게는 최소한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으며, 동시에 농식품 소비 및 섭취를 장려하여 영양·건강의 개선 효과 제고

- 취약계층이 느끼는 소비자 효용 향상과 농식품 소비 및 섭취 증대를 통한 영양·건강상태 개선이라는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식품 지원이 현물보조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적절함.
- 그러나 일률적으로 정해진 현물을 직접보조하게 되면 소비자 선택권과 효용 증가를 보장하지 못하게 됨.
- 농식품의 조달·저장·물류·관리에는 많은 비용이 발생함. 특정 공급자로부터 집중적으로 농식품을 조달할 경우 시장질서가 무너질 가능성도 존재함. 또한, 현물 지원의 경우 안전 및 위생사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함.
- 한편, 품목을 제한하는 바우처 형식의 지원은 특정 농식품의 산지폐기 혹은 수급안정 등의 관점에서 품목을 선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03

취약계층 지원 효과의 증대를 위한 사업운영 방안

3.1. 지원 대상자

취약계층의 식품 미보장성과 영양부족 실태를 근거로 하여 소득, 재산, 연령, 가구 특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 필요

- 취약계층의 식품 미보장성과 영양부족실태 분석 결과 소득수준에 따른 격차가 가장 크며, 연령·지역·가구유형 등 사회·인구 특성도 영향을 미침.
- 또한 식품의 미보장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결과 소득변수가 매우 유의적이며, 가구유형 및 거주지역도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취약계층이면서도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이나 노인, 아동, 장애인 등 특정 집단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발굴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것임.
- 전문가들은 소득수준,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조건, 연령 계층, 가구 유형, 지역 등 총 6가지 선정 기준 중 소득수준을 가장 우선시해야 하며, 특히 차상위계층이 보다 중요하여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함.

〈표 5〉 식품지원제도 도입 시 우선적 지원 대상에 대한 전문가조사(1+2순위)

단위: 명, %

구분	빈도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심	기타 조건 때문에 수급 제외 된 대상	수급 대상자가 아니지만 저소득계층	특정계층 (노인, 아동, 장애인)	특정 지역 거주	기타
전체	70	5.8	42.2	14.6	36.4	1.0	0.0
정부기관	38	8.8	41.2	7.9	41.2	0.0	0.0
민간기관	17	4.0	48.0	20.0	26.0	2.0	0.0
연구자	15	0.0	36.4	25.0	34.1	2.3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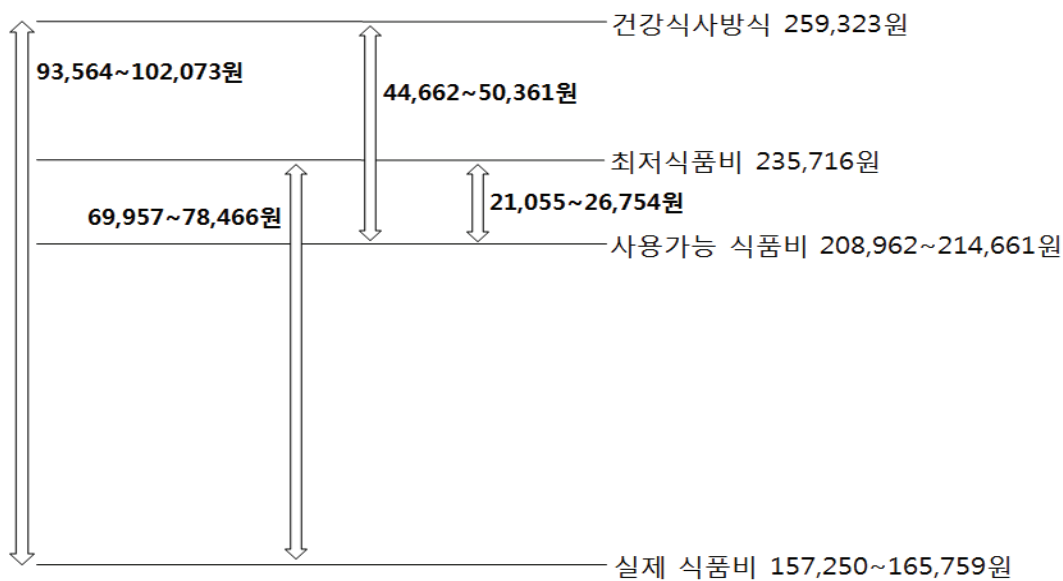
자료: 이계임 외(2017).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3.2. 지원금액

식품비 목표치와 실제 취약계층의 식품비 지출액의 차액을 지원

- 식품비 지원금액은 가정식을 기준으로 목표치(최저식품비 또는 건강식사방식)와 취약계층의 식품비 지출액(실제 식품비 또는 사용 가능한 식품비)의 차액으로 정함.
- 네 가지 경우의 수를 가정할 때, 식품비 지원은 1인 1개월 기준 최소 2만 1,055원에서 최대 10만 2,073원까지 이루어질 수 있음.
 - ① 최저식품비와 사용 가능한 식품비 차액 기준: 21,055~26,754원
 - ② 건강식사방식과 사용 가능한 식품비 차액 기준: 44,662~50,361원
 - ③ 최저식품비와 실제 식품비 차액 기준: 69,957~78,466원
 - ④ 건강식사방식과 실제 식품비 차액 기준: 93,564~102,073원
- 다만, 대상자 규모와 소요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수준을 결정함.

〈그림 1〉 농식품바우처 지원금액 대안 비교



자료: 이계임 외(2018).

3.3. 사업 추진 주체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의 정책목표는 첫째, 취약계층의 농식품 섭취 보장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 둘째, 우리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제고

농식품바우처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농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농산물의 공급과 관련된 업무에 비교우위가 있는 부처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농식품 지원제도의 적절한 운영 부처로 농림축산식품부를 가장 높게 평가

- 취약계층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 가구의 63.0%가 신규 농식품 지원제도의 운영 부처로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함.

〈표 6〉 신규 식생활 지원제도 운영 시 적절한 부처

단위: 명, %

구분	총 응답수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수급자	72	59.7	26.4	11.1	2.8
비수급자	155	64.5	16.8	11.6	7.1
전체	227	63.0	19.8	11.5	5.7

자료: 이계임 외(2018).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의 추진주체로서 필요한 기반과 경험을 모두 갖추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각종 농식품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민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정부양곡 할인 지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학교 급식 식재료 관련 업무,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등을 수행함.

농식품바우처는 누구나 안전·신선한 먹거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푸드플랜의 '먹거리 정의 실현'과 연계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은 스스로 충분한 양의 식품을 조달할 형편이 되지 않는 경제적 약자라 할지라도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푸드플랜의 기본 가치에 매우 부합됨.

- 소득과 성별, 연령, 지역에 관계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안전·신선한 먹거리를 보장받고, 국가는 상생·환경·복지 등의 가치로 지속가능성을 지향해야 함.
- 농식품바우처는 지역 푸드플랜의 구성에서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업이 될 것임.

3.4. 사업 추진 체계

농식품바우처 운영위원회와 농식품바우처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사업을 추진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 내용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농식품바우처 운영위원회(가칭)’를 중앙부처 소관으로 구성

바우처 지급, 관리, 정산, 사업 홍보 등 업무 전반을 수행하는 전담기관 설치 필요

식생활교육은 기존 담당 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은 지역 가장 낮은 곳에서 이루어지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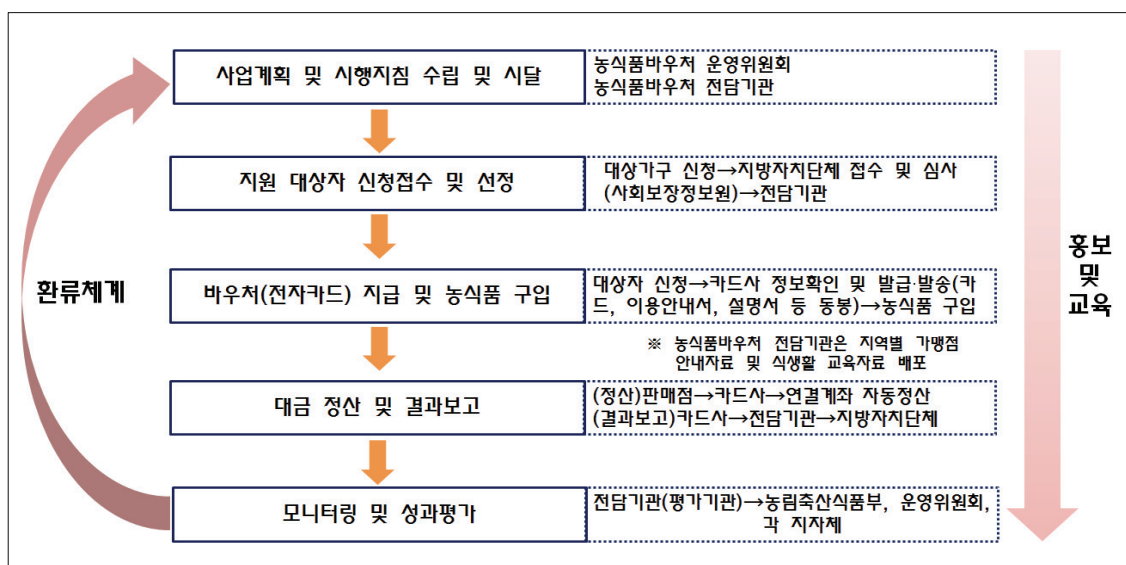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의 바우처 신청·지원·접수에 협조하며 홍보를 통해 지역 농산물 구매를 장려함.

평가 전담기관 지정 및 사업 효과 평가를 통한 환류체계 마련

사업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매년 성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평가 결과를 차년도 운영계획 수립에 반영함.

모니터링 및 효과 평가기관은 사업 전담기관과는 별도로 지정되어야 하며 조사 및 연구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림 2〉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흐름



자료: 김상호 외(2019), 발간 예정.

참고문헌

- 이계임·김상호·김부영. 2017. 『정부의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체계 개선방안』. R81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계임·김상호·엄진영·김부영·김다혜. 2018. 『농식품바우처 지원제도 도입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 이계임·김상호·임소영·허성윤·한정훈. 2019. 『농식품바우처 지원 실증연구』. 농림축산식품부.
- 김상호·임소영·허성윤. 2019. 『농식품바우처 추진체계 구축연구』. 농림축산식품부.
- Canning, Patrick and Brian Stacy. 2019. The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and the Economy: New Estimates of the SNAP Multiplier, ERR-265,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Economic Research Service.
- Levedahl, J. William and Victor Oliveira. 1999. "Dietary Impacts of Food Assistance Programs." America's Eating Habits: Changes and Consequence Chapter 16.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Economic Research Service.
- Jensen, Helen H. and Parke E. Wilde. 2010. "More Than Just Food: The Diverse Effects of Food Assistance Programs." Choices 25(3).
- USDA FNS. <<https://www.fns.usda.gov/pd/supplemental-nutrition-assistance-program-snap>>. 검색일: 2019. 8. 2.

KREI 농정포커스

감 수 이용선 선임연구위원 061-820-2320 yslee@krei.re.kr
내 용 문 의 김상호 부연구위원 061-820-2218 skim@krei.re.kr
발 간 물 문 의 성진석 책임전문원 061-820-2212 jssaint@krei.re.kr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KREI 농정포커스 제184호

취약계층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필요성과 도입 방안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2019. 12.
발 행 인 김홍상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I S S N 2672-0159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